

교육감도 광주·전남 통합 선출한다

시도지사·시도교육감·국회의원
특별법 발의 위한 로드맵 조율
통합 지방정부 명칭·주소재지
27일 추가 회의 최종 확정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주소재지 문제는 1차 가안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하고 전남도청을 주소재지로 합의했고 오는 27일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3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정선·김대중 시·도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해 특별법 발의를 위한 막판 로드맵을 조율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교육행정 일원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6·3 지방선거에서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교육감 통합선출은 시·도 지사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한지 23일 만에 결론이 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교육단체 등의 반대여론이 거세 통합에 유보적이었으나 전격적으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교육감 선출에 긍정적이었다.

시도교육청이 통합에 합의한 것은 광역 행정과 교육 행정을 원전히 일원화해 칭칭 '광주전남특별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시도는 27일 발의될 특별법에 통합 교육감 선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공직 사회의 최대 화두인 신분 보장책도 한층 강



강기정(왼쪽부터) 광주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김원아·양부남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간담회'를 마치고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회됐다. 특별법 내 공무원 인사 조항을 기준 '근무지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에서 '근무지를 보장한다'로 변경해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광주시 공직자 대다수가 신분 불안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강제 전보를 원천 차단해 조직 내부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정부의 재정지원 및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은 특별법 발의 이후 개정안을 통해 항구성을 보장 하자는 의견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따라 연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항구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면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주소재지 결정은 오는 27일 화요일 오전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 과정에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자는 안과, '광주전남특별시'로 명명하고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배치하자

는 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양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안이 맞서자 강기정 시장이 제시된 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교육감 단일화와 공직 신분 보장 등 핵심 쟁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명칭 문제를 매듭짓고 이번주 특별법을 발의해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6월 통합 선거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가장 비싼 땅 충장로우체국 앞 1m²당 1105만원

표준지 공시지가 '소폭 상승'
광주 1.7%·전남 0.3% 올라

올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가 결정·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광주시가 1.70%, 전남도가 0.30%를 각각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3.36%)을 밑도는 수치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상승률(1.47%)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커졌지만, 여전히 1%대 수준에 머물렀다. 5개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2.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광산구(1.89%), 서구(1.55%), 북구(1.54%), 동구

(1.32%)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에서 평균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 지역인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로 1m²당 110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광산구 등임동 소재 임야로 1m²당 1010원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3%로,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했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65.5%로 동결해 도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

화했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장성군이 0.9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목포시(0.85%)와 영광군(0.74%)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 평가의 기준이 되며, 향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식 기자 mskim@kwangju.co.kr

이혜훈 지명 철회

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 못미쳐"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25일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흥의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여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새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지명철회와 관련,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이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며 "보수정당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을 국가 예산을 기획하는 중책을 맡기려 했던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특별시 '재정자주권' 갖춰야 ▶2면

몰려오는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 고심 ▶6면

광주FC 캠프 - 최경록 "광주의 힘 보여준다"▶18면

P assion [열정], V ision [꿈],
T 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내 일의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OK! 지금은
전남시대

지역은 더 부강하게

복지는 더 따뜻하게

교통은 더 빠르게

- ☒ 경쟁 불필요
- ☒ 특별한 보상
- ☒ 일자리 증가

-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 ☒ 60분 생활권 완성
-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 축제·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 의료자원 공동 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